

한전, 전기료 대신 받은 '주식 116억' 휴지 조각

펀드운용사에 한전 간부 재취업 전력 신산업펀드 실적은 '전무' 펀드 운용보수 등 재점검 해야



한국전력공사가 기업들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폭락해 116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력 신산업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펀드운용사에 고액의 운용보수를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운용사에는 한전의 전 고위직 간부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해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채권확보용 출자전환 주식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한전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184개 업체로부터 전기요금 대신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장부가액)는 총 70억원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 186억원과 비교해 38%에 불과한 액수로 116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요금 대신 해당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고 왔다.

최근 5년여간 주식 보유 기업 수는 21

개에서 184개로 늘었다.

하지만 주식 취득가액 대비 실제 가치(장부가액)의 비율은 2013년 85.7%에서 올해 6월에는 37.8%까지 폭락했다.

특히, 전기요금 대신 받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2013년 79억원에서 현재 2억원까지 떨어져, 취득가액 대비 주식의 가치(장부가액)가 88.9%에

서 2.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전은 지난 4월에서야 부실화된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며 NH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 신산업펀드 투자현황 및 국회에 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전에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직접 투자액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투자액은 전무했지만, 같은 기간 한전이 상위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지급한 운용보수는 100억원이 넘었다.

2017년 58억원, 올해 43억원 등 101억원을 지급했다.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력 신산업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운용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을 통해 상위펀드가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하위펀드는 3개의 민간 위탁사가 전담하는 간접투자방식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전력 신산업펀드의 투자실적은 총 5012억원의 펀드조성금 중 하위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금 150억원에 불과하고, 상위펀드의 직접투자 실적은 전무했다.

어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미수금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유한 주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며 "한전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손 놓고 있다가 손실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력 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며 "적절한 펀드 운용보수 산정 등 전력 신산업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2018년도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2018. 10. 15(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11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에서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캠코

캠코 용역근로자 504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에서 제6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캠코는 올해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4월 26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6차례, 실무협의회 6차례, 근로자 대표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용역근로자 504명에 대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환대상인 캠코의 용역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 위탁개발 건물(20개),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유지 위탁개발 건물(4개)과 캠코가 보유한 건물(12개)에 대한 시설관리, 경비, 미화업무 등을 맡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신보, 신임 감사에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신용보증기금은 신대식(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신임 감사에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1951년생인 신 감사는 통영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산업은행 동경지점장과 신탁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쳐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

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을 지냈다. 신임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2년이다. /김희주 기자



장애인고용공단-국립암센터 의료·보건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암센터는 15일 국립암센터 첨단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암센터가 장애인고용

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력 채용이 어려웠던 보건·의료 분야에 장애인고용 모델 사례를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 이후 병원 내에서 기존 직무 중에 중증장애인이 진 입할 수 있는 틈새 직무를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장 적응 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퇴직월 하루 근무해도 한달 월급 지급”

위성곤 의원, 산업부 소관기관 분석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 74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224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무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



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무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이지만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퇴직월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8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만도 세 차례나 확인됐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

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8168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 위반 116명에게 2억956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권 행기가 도를 넘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신중년 인생3모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 참여 사례 및 변화된 경험담, 신중년이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생3모작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 등이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및 기업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8명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중장년일자리 서비스 활성화 및 인식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